

한국인권학회 · 인권법학회 ·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
권법센터 2023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한국 사회의 인권 책무 – 시공간의 확장>

다국적기업과 인권

– ‘책임 있는 사업 철수’ (Responsible Exit)

강민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수료)
2023.5.13.

1. 논의의 배경

(1) 분쟁 · 고위험지역에서의 다국적기업 철수와 관련한 국제적 관심 고조

- 2017년 미얀마 군부쿠테타
- 군부 쿠테타 발생 후 군부정권의 시민운동 탄압으로 현지 주민들의 인권위험이 증가
 - 군부정권의 국유 산업시설 장악 및 주요 기업 통제
→ 기업활동 자체가 군부 자산과 활동에 직간접적 기여, 열악하여진 노동권을 악용한 이익창출 등 기업이 인권침해를 야기, 혹은 그에 기여, 방조하는 등 연계 될 위험이 증대
 - 기린, 테스코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군부와의 연결성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따라 미얀마에서 사업 철수
 - 한편 무기준의 철수가 오히려 현지 인권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 (예: 텔레노르)
 - SOMO representing 474 Myanmar CSOs vs. Telenor ASA, 27 July 2021. NCP Norway:
 - 한국 다국적기업 포스코인터네셔널에 대한 국내 OECD NCP 진정은 1차심의에서 인권침해 상 황과의 연관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 (미얀마 정부와의 연계 vs (정부의) 인권침해와의 연계)
- 202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 국제적 경제제재 및 현재 1000여개 다국적 기업의 철수
 - 인권침해, 주체, 피해자가 동일한 공간에 있던 미얀마와 달리 인권침해(무력침공) 주체와의 단 절의 의의
 -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러시아 내 주민들의 인권(건강권, 사회권 등)에 대한 우려 발생
 - 인권침해에 대한 단절로써의 철수 vs 정치적 결정으로써의 철수

1. 논의의 배경

(2) 기업의 사업 생애주기(life cycle) 관점에서의 인권관련 위험

- 시에라리온 **Addax Bioenergy Project 사례 (Malena Wåhlin, 2017)**
 - 2014년 에볼라 발발에 따른 시에라리온 내 토지산림 관련 대형프로젝트들의 대거 중단 혹은 축소
 - 단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중단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상당한 인권영향 발생
 - Addax Bioenergy Project를 포함 시에라리온 내 산림프로젝트로 인해 현지 선주민들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선주민 권리, 토지수탈-주거권, 식량권, 자원권)
 - 사업중단/철수로 인해 현지 주민 대다수 근로자의 실직→ 위와 맞물려 생계대안의 공백상황 (노동권, 생계권)
 - 가정에서 학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아동들의 취학을 감소 (아동권, 교육권)
 - 지역사회 차원의 대량실직으로 인한 지역정부의 재정난으로 노령여성 등 취약집단에 대한 기존 지원의 중단(전반적 사회보장권)
 - 프로젝트 중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한 후처리 중단, 미흡으로 인한 식수접근권 저하 (식수접근권, 건강권)
 - 사업중단 및 재개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합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PF)
 - 현지 기업인 Addax Bioenergy는 물론 주요 투자자인 네덜란드 및 스웨덴 개발은행(FMO, Swedfund)는 사업전반 및 사업중단, 재개 과정 어느 과정에도 인권평가 및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현상적/당위적 필요

- 대규모 프로젝트나 지역사회 경제에 영향력이 큰 기업활동의 중단에 따른 인권영향의 규모와 심각성
- 국제인권규범상 점차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인권책임, 경영관점에서 강화되고 있는 ESG 경영, 책임있는 거버넌스(Responsible Governance) 요구가 기업활동의 전개 뿐만 아닌 중단 및 철수에도 적용될 필요성
- 미얀마, 러시아 사례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기업의 결정이 정치적, 경제적 기준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당위적 기준으로서의 역할

3. 규범화의 맥락

- 국제인권레짐에서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전개
 - 세계시장화 맥락에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논의 대두 + 전지구적 거버넌스 갭의 극복노력
 - 국제인권법상 규정된 인권을 보호할 의무주체인 국가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지역에서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및 그를 통한 이익창출에 대한 문제화 (Race to the bottom, Global Polarization) → 사적주체이나 개인에 비하여, 때로는 국가에 버금가는 지역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기도 하는 기업 또한 그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할 ‘책임(Responsibility to respect)’이 있음을 명시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차원에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 법적의무를 가지지 않는 연성법적 차원에서 UN기업과인권지침(UNGPs), ILO 다국적기업 삼자선언, OECD 다국적 기업 지침 등이 존재
- 현재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기본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기업행위의 위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며 기업활동에 고려하는 것 (Pillar II)
 - 이때 기업의 행위에는 작위(actions)와 부작위(omissions)를 모두 포함하고 (원칙 13 및 주해),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인 인권실사 (Human Rights Due Diligence)에서 기업활동의 전과정을 포괄해야 한다(원칙 17)고 하므로 기업의 사업 ‘철수’ ‘중단’의 행위 또한 기업의 인권책임 및 인권실사 시행의 범위에 포함됨을 강조할 필요

4. 해외 관련 논의의 전개현황: 국제기구

-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분쟁지역 분과차원의 논의
 - 2019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분쟁지역 관련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Annual conference of the Network on Business, Conflict and Human Rights (BCHR))중 UN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이 특히 중동 지역에서 분쟁의 역학과 인권침해에 연루 될 위험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특히 지역을 떠날 수 있는 기업들의 “책임있는 기업철수”의 기준에 대한 명료화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UN BHRWG + UNDP “Heightened Human Rights Due Diligence for Business in Conflict-Affected Contexts: A Guide” (2020)
 - 2020년 10월 제 75회 유엔총회에서 “기업, 인권, 그리고 분쟁영향지역: 강화된 행위를 지향하며”에서 책임있는 기업철수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원칙 지침 발간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2018)
 - “인권에 대한 악영향을 멈추거나 완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기업의 개입중단(disengagement)를 고려할 수 있다”(OECD, 2018, p.29-31)
 - 기업이 개입중단을 선택할 때에 취할 수 있는 행위들의 제시 -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p.80)

4. 해외 관련 논의의 전개현황: 정부기구 및 관련기관

- 2022.2.23 EC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안)
 - 제8조 최후의 조치(last-resort action)로서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 및 해지 언급
 - 분쟁, 고위험 상황에서의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의 비판
- 2022.9. 일본경제산업성 <책임있는 공급망등에서의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責任あるサプライチェーン等における人権尊重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분쟁관련지역에서의 책임있는 철회(紛争等の影響を受ける地域からの「責任ある撤退」)”
 - 분쟁상황에 국한하여 논의하고 있고, 그 내용이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해관계자에 통지한다는 원론적 원칙
 - 책임있는 철회를 대비,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국가가 발간한 기업과 인권관련 실사 가이드라인에서 직접 언급하였다는 의의
- 2021.4. 미국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Contract Clauses to Protect Workers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2.0.>
 -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미국 상품 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일상사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 공급망상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델 약관(Model Contract Clauses to Protect Workers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2.0.) 중 구매자 입장에서 책임있는 기업철수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기준들을 Schedule Q라는 문서의 일부를 통해 제시 (Snyder and Maslow, p. 116-7)
- 국내 관련 법안: 2022.12.08 이용빈 의원실 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내전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인권실사 의무화 제시

4. 해외 관련 논의의 전개현황: 관련단체 및 기업

시민사회, 노동기구 등 관련단체

- H&M등 의류제조업 글로벌브랜드 및 그 노동조합의 합의체로 결성된 ACT(Act on Living Wages):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노동자 및 공급망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책임있는 사업철수 정책’에 관한 2페이지 분량의 짧은 안내문서 발간
- 의류제조업 노동자권리를 위한 비정부기구인 Fair Wear Foundation: ‘기업의 책임있는 사업철수 지침(Responsible Exit Strategy Guidance, 2018)’을 발간
- 임팩트 투자 자문, 연합기구인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GIIN): 기업의 책임있는 사업철수 관련 지침 및 사례연구를 제시한 보고서 ‘영향의 지속: 책임있는 사업철수의 필요 <Lasting Impact: the Need for Responsible Exits(Hannah Schiff and Hannah Dithrichd, 2018)’ 발간
- 분쟁, 고위험 등 불가항력적 사항만이 아닌 경영상 판단 등 일반적 상황에서의 사업철수에 있어서도 노동자 및 현지상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

기업

- ACT의 회원기업인 패션브랜드 ASOS의 경우 ACT가 제시한 책임있는 기업철수 지침에 따라 자사 자체의 책임있는 기업철수 정책문서를 발간.
- 그 외 Speedo를 포함한 유명 스포츠웨어 및 아웃도어 브랜드를 보유한 Pentland Brand의 또한 간략한 자사차원의 책임있는 기업철수 관련 선언문 및 위험요소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

5. '책임있는 사업철수'의 의의: 용어의 선례

- **Exit**의 개념: 군사학이나 경영학, 특히 투자이론에서 군사작전, 사업 혹은 투자의 중단에 따르는 사업상 비용과 위험을 계산한다는 맥락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국문으로는 '출구전략(Exit plan)'이라는 용어로서 널리 사용
- **Responsible Exit** 개념의 대두
 - 군사학 관점에서 2000년대 특히 1990년대 이라크 등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제제조치 및 인도적 지원의 중단, 철수과정에서 주로 철수하는 주체의 안전 및 현지에서의 지속적 평화유지 혹은 그 실패 논의 개념으로 사용 (Peter Boone et al., 1997) (Kerina Tull, 2020)
 - 국제개발협력학 혹은 개발학 관점에서 NGO 등이 개발협력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지원사업 철수에 관한 전략으로서 지속가능한 사업철수(Sustainable Exit), 프로젝트 종료 프로토콜(Project close-out protocol)과 교차적으로 사용 (Rachel Sadoff, 2020)
 - 여기서 '책임있는' 의미는 주로 현지의 개발협력사업이 NGO가 철수한 이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미리 철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대비할 것, 협력체 및 이해관계자와 주기적으로 의논할 것, 꾸준히 소통할 것 등 (Hayman et al., 2016)
 - ESG투자 및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 투자 대상의 사회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고려)관점에서 투자철회 혹은 축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전 고려되었던 사회적 영향력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개념으로 사용

→ 사업철수로 인한 현지에서의 악영향을 최소화, 지향하던 가치/영향력의 유지

5. '책임있는 사업철수'의 의의: 정의와 범위

“기업의 사업 중단 및 철수의 결정과 이행 과정 및 이후에서 발생하는 인권영향을 예측, 고려하고, 그 피해를 방지, 최소화, 보상하여야 할 책임과 주요 원칙들”

- **책임의 범위:** UNGP가 규정하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차용하여 해석하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업이 관련된 행위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는 것 (11조), 이는 곧 인권침해의 방지, 완화, 적절한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11조 주해)을 의미
 - 국제인권레짐에서 중심으로 논의되는 ‘식별’의 방법론은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시행. 체계/방법론으로서의 실사를 넘어선 가치/태도로서의 포괄적 선관주의(Due diligence)로의 재확장 필요
- **철수의 층위:** 기업의 전면적 철수, 기업구성기관의 일부 철수, 사업의 일시적 중단, 사업의 축소, 사업의 이양, 투자철회 등을 포함
 - UN BHRWG나 OECD의 경우 전면적 단절과 피난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Exit’이라는 단어 대신 일시적 중단이나 관련업체와의 소극적 단절까지 포괄할 수 있는 ‘비개입(Disengag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철수(Exit)’는 그 하위개념으로 이해 (OECD, 2011)
 - 번역어로서의 “철수” 출구/철수/철회 등. 일본은 「責任ある撤退」 “철퇴(철수+퇴진)”으로 사용

5. '책임있는 사업철수'의 의의: 상황/국면별 분류

1. 불가항력적 상황(Force Majeure)에서의 철수

- 기업이 예측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전쟁·침공·내전·분쟁과 같은 국가관련 행위, 시민봉기나 장기파업과 같은 사회적 상황, 화재·폭풍·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운송수단이나 에너지의 단절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심각한 문제 등(Bloomberg, 2022) - 국제 인권레짐에서의 분쟁지역(conflict-affected area)의 확장 개념
-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상거래 및 하청 계약상 이른바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s)'을 포함하여 심각한 상황에서 매수자의 사업 철수 및 중단에 대한 권리와 면책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최근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불가항력 조항을 이용하여 공급망 상 큰 피해를 준 바있고, 판데믹 이후 불가항력 조항을 도입하는 경우도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있는 사업철수 맥락에서의 집중된 논의가 필요 (Sherman, J. F., 2021.)

2. 공급망상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비개입(disengagement)으로써의 철수

- 공급망 상 하청, 협업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형태의 경영행위를 지속하고, 모기업 입장에서 이를 중단하거나 완화하고자하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공급망상 인권책임 관리를 위하여 비개입의 명목으로 사업을 철수
- 위 불가항력적상황, 분쟁지역에서 인권침해 위험이 고조되므로 긴밀히 연결

3. 기타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철수

- 현지 경제와 노동자 보호, 기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수명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Fair Wear Foundation, 2018 등)

5. '책임있는 사업철수'의 의의: 책임 및 협력주체

- 기업활동의 결정행위자로서 해당 기업 및 인권보호의 의무담지자인관련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협력주체로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식별, 역할을 정리할 필요
 - 현지 및 다국적기업의 모국 정부, 현지 지방정부, 해당 기업이 소속되었거나 연관되어있는 무역 혹은 산업 관련 공적 기구 및 연합체, 지역사회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각 영향관계 내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체계와 그 지침, 기준의 필요성
 - 사업철수의 배경과 맥락, 특별히 기업의 소속 산업에 따른 분류: 예컨대 Wåhlin, M. (2017)의 시에라리온 Addax Bioenergy의 사업철수에 관한 제언은 철수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철수대상 기업, 해당기업의 주요 주주, EDFI(Association of European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등 개발원조 관련기관 및 투자/재무관계 기관, 기타 대형 토지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 및 투자자, 다국적기업의 모국(출발국가) 및 주요 투자기업의 정부, 다국적기업의 철수대상국 정부를 포함
- 현지 및 다국적 기업 정부, 그리고 해당 기업이 소속되었거나 연관되어있는 무역 혹은 산업 관련 공적 기구 및 연합체 등의 “공적 역할”과, 그 외 지역사회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견제적 역할”이 구분되어 제시될 필요
- 이해관계자들이 빠르게 소통, 협력하여 대응하고 특히 사업철수가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시민, 지역사회, 노동자 당사자들의 개입이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소통, 구제기구의 형태와 절차의 필요

5. '책임있는 사업철수'의 의의: 인권영향 이해관계자

- 사업철수에 따라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될 집단을 이해관계자별로 분류할 필요
- 고용대안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피난처가 없는 노동자, 공급망상 공급업체 및 판매업체, 노조 및 현지 활동 중이던 노동운동 관련자, 현지 지역사회, 그 외 경영상 기타 이해관계자. 투자기업의 경우 지역정부, 협력투자자, 차기 투자 혹은 매수자(next takers) 등 (Snyder and Maslow, Myanmar Centre for Responsible Business [MCRB], 2022; Snyder and Maslow; UNHCR 2020,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JMETI 2022], ASOS)
-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던 소비자 (JMETI, 2022), 특히 해당 기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고 있었을 경우 그 피해를 방지, 완화하기 위한 고려의 필요 (Schiff and Dithrich, 2018)

5. '책임있는 사업철수'의 의의: 주요원칙

- 1) **예측**: 미리 대비하고 예측할 것 (기업의 철수상황, 그리고 인권에 미치는 영향 차원)
 - 2) **소통**: 이해관계자들, 특히 인권영향대상자들과 시의적절하고 투명, 명료하게 소통할 것
 - 3) **예방, 완화**: 예측되거나 이미 발생한 인권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
- 3개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사업철수 이후의 사후조치나 기타 산업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와 같은 부가적 절차를 추가하고, 해당 사업철수의 문맥과 산업의 종류, 형태에 따라 변형

5. '책임있는 사업철수'의 의의: 주요원칙

1. 예측 및 대비

- 기본적으로 인권실사의 시행, 그 실사 내에 포함되어야 할 관련내용들:
- 사업철수를 고려할 상황이 생기기 전에 기업차원에서 분명한 철수/출구 계획을 수립하여 두어야 함. 이 계획에는 사업철수 이후 지역사회에 미칠 인권영향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 가능한 한 최대치로(maximum possible consideration, JMETH 2022) 예견되어 포함되어야 함
- 성급한 사업철수가 뒤늦은 사업철수만큼이나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Siniša Milatović., 2022)
- (a) 사업의 유지 혹은 중단이 분쟁상황을 악화시킬 것인가 (b) 사업의 유지 혹은 중단으로 발생한 인권침해가 이익보다 큰가 두 질문을 고려하여야 함
- 인권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 및 영향을 받은 이들에 대한 보상책에 대한 논의도 사업철수 이전 단계에서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취약집단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두어야 함
- 특히 고도로 군사가 개입한 상황(militarized situation)에서는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에 연루될 위험성을 파악하여야함. (UNHRC, 2018)

5. '책임있는 사업철수'의 의의: 주요원칙

2. 이해당사자에 시의적절한 예고와 투명성 있는 소통

- 지역사회, 공급업체, 노동자 및 기타 협력체에 사업철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통지하여야 함.
- 통지의 합리성은 그 시기와 내용 모두에 해당하여야 할 것
 - 상계 일본 경제산업성 지침은 예컨대 자원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이 자원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권고.(p.25)

5. '책임있는 사업철수'의 의의: 주요원칙

3. 인권침해의 예방과 부정적 영향의 완화

- 예방과 완화에 대한 관련 지침의 기준들:
- BHRWG의 보고서는 분쟁상황을 상정한 기업의 사업철수에서 “근로자를 피신시키는 것 이상의 조치”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확보할 것”, “피신할 수 없어 남은 근로자의 실직이나 안전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Para. 64-65)
- 일본 경제산업성 지침은 인권피해 완화조치에 대하여 “최소화(minimize)”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근로자들과 안전문제에 관하여 대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며,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시 (p.25)
- Snyder and Maslow(2018)가 미국변호사협회에 제출한 모델계약약관은 **상업상 합당한 노력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에 준하면 족하다고 봄. 다만, 사업철수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 계약의 해지는 계약해지일 전 매수자의 주문에 의해 공급자가 생산한 수용가능 물품에 대한 대금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일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권리 혹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어 공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

예시: 체크리스트

- ✓ 철수전략이 존재하는가?
- ✓ 철수전략은 사업 도입단계부터 마련된 것인가?
- ✓ 사업철수 단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할 계획이 있는가? 계획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최대한 확보되었는가?
- ✓ 인권피해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가?
- ✓ 기업활동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소유주와 투자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한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연속성이 요구 혹은 확보되었는가?
- ✓ 사업이양의 경우, 근로자,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 및 장비를 포함한 사항들에 대하여 투명성요건과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가?

(Siniša Milatović, 2022 p.36)

예시: 러시아 사례에서의 사업철수 시나리오

- 러시아와의 사업관계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영향평가
 - 인권환경 영향에 실질적 잠재적 영향을 야기, 일조, 연계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 특별히 러시아 국영기업과의 합작협력 상황에서 러시아 군수 장지 등의 환경 영향평가 필요.
 - 특히 러시아의 크림미아 반도 및 조지아 점령시 즉각인권영향평가 실시
- 러시아 공급업체와 기타 사업협력체에 대한 매핑
 - 군사 혹은 보안 기관과 연계되어있지 않은지 확인
 - 공급 및 가치사슬 매핑을 통해 군사활동 및 필수재화, 서비스 조달, 기술적 협력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지 않은지 인권실사의무를 통해 확인
- 러시아 내 기업의 인권관련 영향력 최대화
 - 러시아 시장내의 사업철수및 타기업체와의 합작 협력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집단적으로 확대하고 당국의 전쟁 중단 혹은 인권침해 완화 결정에 대한 목소리내기를 통해 긍정적 인권 영향력 증대
-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안전한 채널을 수립
 - 지역사회나 근로자 등 우크라이나 이해관계자들 및 러시아 인권운동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의 대응과 철수 전력에 대하여 계획
- 긴급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필수재화 및 서비스 생산전달에 대한 결정에 활용

6. 규범화의 방향성

- 국제인권레짐에서 기업과 인권 논의의 경성화 흐름
 - UN 차원 ‘기업과 인권조약’(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의 추진
 - EU의 기업 인권실사의무화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안 채택, 유럽 및 영미권 주요 국가의 관련 인권실사법 제정 등
 - 인권실사 의무화를 통한 예방을 중심으로 전개
- 국제인권규범 및 지역적, 국내적 관련 규범과 지침에 ‘책임있는 사업철수’ 개념의 삽입: 두가지 접근방식을 고려
 - (1) 분쟁/고위험/팬데믹 등 긴급상황에서의 기업의 대처 관점에서의 특별규범화
- 최근 국제인권레짐의 접근방식: 분쟁지역에서의 기업과 인권 전반에 사업철수의 내용을 일부 포함
 - OHCHR BHRWG 분과형성, 관련 보고서(2020) 및 지침(2022) 발간
 - 인권침해의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특별한 주의(special attention)”을 요하고, 강화된 인권실사 및 철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확장할 필요
- (2) 인권실사에 기업활동의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일반규범화
 - 현재 인권실사에서 기업활동은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 다국적활동, 해외투자 등 공급망 혹은 가치사슬의 ‘연결성’에 집중
 - 인권실사에 기업활동의 착수, 진행, 중단 혹은 종료, 재개 등을 포함한 시간적 범위를 포함하도록 견인
 - 금융투자를 포함, 기업활동의 도입과 철수(Entry and Exit)에 대한 기준의 강화
 - 사업철수의 국면/상황별 재분류: 불가항력, 인권침해에 대한 비개입, 경영상 결정

6. 규범화의 방향성

- 국제인권레짐에서 기업과 인권 논의의 경성화 흐름
 - UN 차원 ‘기업과 인권조약’(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Regulat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의 추진
 - EU의 기업 인권실사의무화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안 채택, 유럽 및 영미권 주요 국가의 관련 인권실사법 제정 등
 - 인권실사 의무화를 통한 예방을 중심으로 전개
- 국제인권규범 및 지역적, 국내적 관련 규범과 지침에 ‘책임있는 사업철수’ 개념의 삽입: 두가지 접근방식을 고려
 - (1) 분쟁/고위험/팬데믹 등 긴급상황에서의 기업의 대처 관점에서의 특별규범화
- 최근 국제인권레짐의 접근방식: 분쟁지역에서의 기업과 인권 전반에 사업철수의 내용을 일부 포함
 - OHCHR BHRWG 분과형성, 관련 보고서(2020) 및 지침(2022) 발간
 - 인권침해의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특별한 주의(special attention)”을 요하고, 강화된 인권실사 및 철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확장할 필요
- (2) 인권실사에 기업활동의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일반규범화
 - 현재 인권실사에서 기업활동은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 다국적활동, 해외투자 등 공급망 혹은 가치사슬의 ‘연결성’에 집중
 - 인권실사에 기업활동의 착수, 진행, 중단 혹은 종료, 재개 등을 포함한 시간적 범위를 포함하도록 견인
 - 금융투자를 포함, 기업활동의 도입과 철수(Entry and Exit)에 대한 기준의 강화
 - 사업철수의 국면/상황별 재분류: 불가항력, 인권침해에 대한 비개입, 경영상 결정

7. 결론

- 현재 ‘기업과 인권’의 국제적 경성규범화 과정에 대한 긍정적 전망 - 기업 인권영향의 ‘공간적 확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의에 기업의 책임있는 사업철수를 포함한 ‘시간적 확장’ 관점을 추가할 필요
 - 구체적 방법론은 기업의 인권실사: 주요 원칙 또한 기존의 인권실사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음 (예측, 소통, 예방 및 완화)
- 사업 생애주기 관점 뿐만 아니라, 국면/상황별 사업철수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분쟁, 재해, 팬데믹 등 긴급위기상황 및 현지에서의 인권침해 고위험 상황에 대한 특별실사의 포함
 - 대분류(국면별) 불가항력/ 공급망 상 심각한 노동권침해/ 경영상 결정
 - 보조분류(산업별) 제조업/천연자원개발/건축/투자금융/서비스업 등
- 국제기구 및 국가차원에서의 지침제시, 지원 및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공적역할” : 현지 및 다국적 기업 정부
 - “협력적역할” : 무역 혹은 산업 관련 공적 기구 및 연합체, 지역사회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 기업의 책임있는 사업철수의 기준마련 및 규범화는 인권책임이라는 공익적 가치 뿐만 아니라, 전쟁, 팬데믹 등의 긴급위기상황에서 기업이 급변하는 정치, 경제적 기준과 기타 사회적 혼란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안전과 당위를 담지한 경영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작용할 것

감사합니다

강민주

jo.mjkang@gmail.com